

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 총동원

당 차원 재판 변호인단 구성 검토 23일 장외집회...정권 비판 여론전 당내선 사법부 압박 악영향 우려도 "재판 불복 연상 고강도 비판 경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로 규정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 사법부 압박이 격해지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권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에 대한 성토는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고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고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는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도 이어가며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6일 3차 집회처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개별 의원 차원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전에 기댄 총력 대응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법부 불신을 부추길 수 있는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은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재명 지

키기를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비치며 중도층에 반감을 살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제기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1심 판결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재판 불복을 연상하게 하는 강도 높은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남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한 법적인 대응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쫓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 상황은 아직은 엄두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정 시한을 넘어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예산안

을 의결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에,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에 각각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됐다.

여야는 전날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까지 소위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차가 큰 데다 김건희 특검법과 이 대표 재판리스크 등으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미정 "광주시, 난자동결기술비 지원 기준 낮춰야"

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기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예산 85.7%가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사진)은 19일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지원 대상 여성의 항물라관호르몬(AMH) 수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난자동결도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한 난자동결기술비 지원



사업은 11월 기준 겨우 3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했다. 부진 원인으로 AMH와 소득기준 부적합 42.8%, 거주요건 부적합 2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리 추경에 6000만원을 감액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추계로 2022년에만 4230명이 난임진료를 받아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졌다"며 "항물라관호르몬 수치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서임석 "주민 직접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폐지 위기"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 플랫폼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임석(사진) 광주시의원은 19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가경정심사에서 "지난 2019년 시작된 정부의 일몰 사업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여러 현안을 주민이 해결해나가는 모범적인 사업"이라며 "정부에서 곧 종료한다고 시도 이를 폐기하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그간 이 플랫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모여 집중 토론과 문제해결 협약을 이어왔다. 지난 2022년에는 '고려인동포 긴급지원과 도시재생 지원'을 협업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좋은 사업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명맥은 이어가야 한다"며 "2025년 분예산을 이미 편성해 어렵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다시 우리 지역 현안을 살피는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욱 의원 등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신문고 진행현황에 꽃을 달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스

조국혁신당, 오늘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박근혜 때보다 분량 많아"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15개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

함됐다"며 "홈페이지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광철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함께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에

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혁신당 측은 향후 조국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진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주택 중개보수 조례 통과

나광국·이현창 도의원 대표발의

'전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과 '전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나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나광국 도의원



이현창 도의원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다.

나 의원은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창 도의원(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안전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